

충북도,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한다

총사업비 1055억원 투입... 충북도민 전체의 1/2 지원
저소득층 전 가구 각 40만~60만원... 내달 초 시행

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 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는 중복지원 문제로 제외됐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지급이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돼 경제 회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용 기간도 3개월로 제한했다.
도는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 등이 반영된 제2회 추경이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 의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9988 행복나눔미 등 도와 시·군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은 적극 재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트로트를 하겠다"고 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도, 3회 추경안 2311억원 도의회에 제출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충북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등의 특정 계층을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지역경제 피해 복구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는 총 2311억원(일반회계 2207억원, 특별회계 104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해 추가로 특별 지원을 한다. 도가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한 긴급재난지원금에 소득하위 70%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다.
비량 끝에 몰린 영세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영세농민, 공연 예술인 등 특정 계층의 고통 해소는 부족하다. 총사업비는 461억원이다.
지역경제 피해를 회복하고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232억원도 반영했다. 중소기업·지역상권 복원과 정상화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개발사업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농식품 판로 개척·유통체계 개선 지원 등이 다.
문화·체육·관광활동 재개 지원과 혁신선도 사업에는 39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7차 충북권

충북공동모금회·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코로나19 성금 기탁

각각 10억 100만원·1000만원씩 충북도에 전달
이시종 지사 "사태 조기 종식돼 경제 회복 기원"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와 충북지구 청년회의소(회장 고영근)는 9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후원금품을 기부했다.
기부금액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억 100만원, 충북지구청년회의소 1000만원이다.
노영수 회장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후원금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기부 활동을 실천한 각 기관·단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영수 회장이 9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10억 100만원을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기탁했다.

충북도, 2020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발표

충북도는 '내일(My Job)로 행복한 도민! 내일(Tomorrow)이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올해 지역일자리 106,600개 창출과 고용률 71.1% 달성을 목표로 지역산업과 청년과 여성일자리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4대 분야 11개 추진전략 45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분야별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기반 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 분야 추진 전략은 바이오,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고도화에 의한 일자리 확대와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신일자리 거점 영역 조성이다.
인적자원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분야는 청년 일자리 인프라 결실화 및 역량강화, 경력개발 및 경력잇기를 위한 여성친화 일자리 조성, 지속가능한 중장년 일자리를 위한 지원 다변화, 일·생활 균형 기반 노인(장애인) 일자리 조성이다.
일자리-사회 융합형 좋은 일터 분야는 사회적 경제의 확장과 따뜻한 일자

충북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시행

88억원 투입·9100여명 지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급

충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 75억원에 충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추가하여 총 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내 취약계층 9,100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600여명에게 월 2.5만원(월 최대 50만원) 2달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이다.

노동부의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약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300여명에게 월 2.5만원(월 최대 50만원) 2달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두에게 봄이 올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가 나눔의 꽃을 피워가겠습니다.

2019년 158억 원으로
3,199개의 기관과
22,951명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기부 상담 043-238-9100 자원 상담 043-238-9200

총 지원금
158억5천만원
(복권기금배분 포함)

지원대상

사랑의열매는 모두를 돕습니다
아동/청소년 34.3억, 노인 31.9억, 장애인 18.8억, 여성/다문화 9.6억, 위기계층 17.4억, 지역사회 46.5억

사업분야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합니다

기초생계 97.6억, 교육·지원 10.9억, 주거·환경개선 9.2억, 보건·의료 5.3억, 성리·정서 5.3억, 사회적돌봄 강화 21.5억, 소중·참여 확대 1.5억, 문화·역량향상 7.2억

보은, 일자리 지원형 '온라인 판로' 구축

보은 대추·장애인복지관이 생산한 제빵 판로 확대 청주대, '주주본 프로젝트' 도내 사회복지 시설에도 적용

청주대학교는 보은군과 함께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형 온라인 플랫폼인 '주주본'을 구축했다. '주주본'은 보은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대추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하는 제빵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인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산품인 대추를 이용한 제빵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지만 홍보와 판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없어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청주대 지역현안 연구모임'은 대학의 다양한 전문 인력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나섰다. 이 연구모임은 노인·장애인 일자리 활성을 위한 '주주본 프로

젝트'를 6개월 간 진행했다. '주주본'은 보은 대표 특산품인 대추의 영문명 '주주베(Jujube)'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하는 노인·장애인 제빵 브랜드 '본빵'을 합성한 단어로 지어졌다.

청주대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학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 산업디자인 전공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인과의 웹 접근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

산업디자인전공은 다양한 소비자 계층을 고려한 웹디자인을 설



청주대 '주주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최종 기능을 확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하고,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장애인의 생산량 및 복지시설의 특성이 플랫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언했다.

이 같은 협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형 온라인 플랫폼인 '주주본'은 지난달 27일 구축이 완료됐다.

차천수 청주대 총장은 "청주대 혁신사업의 목표인 경험,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혁신에 완

벽히 부합한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역사의 기여를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복지 분야와 대학이 어떻게 협업 가능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며 "충북 관련 사회복지시설 혁신사업의 목표인 경험,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혁신에 완

증평군, 코로나19 극복 지원책 마련

가정·공장 등 상·하수도 요금 3개월 간 20% 감면 공익 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산단 입주기업 폐수 재투자적립금 3년간 50% 감면

증평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기업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일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군은 8일 '상·하수도 요금 한시 감면'과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을 결정했다. 상·하수도 요금 한시 감면은 일반가정과 소상공인, 공장 등 업

종 구분 없이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하며, 5~7월 3개월 간 20%를 적용하면 감면액이 4억 42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말 중단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는 1개월 치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한다.

군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732명의 참여자 중 선지급에 동의하는 참여자에 한해 3월 분 활동비를 우선 지급, 사업 재개 후 3개월 간 연장 근무를 통해 정산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3월에는 3년 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34곳의 폐수 재투자적립금 50% 감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9억 5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주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민 복지향상 36개 시책 추진

삶의 질 향상·인구감소 해소 기대

증평군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감소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36개 시책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망 구축, 노후생활 보장, 여성·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정주기반 확충 등 4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군은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망 구축을 위해 출산부터 육아까지 전방위 지원을 한다.

우선 출산 시 축하금 명목으로 출생 아이 수에 따라 30~460만원 지원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포츠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증평군가족센터, 창의테마파크 등 군이 건립하고 있는 각종 시

설에도 돌봄 공간을 마련해 보육 부담을 줄여나간다.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1회 아동정책혁신 창안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후 생활 보장분야에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들이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이 포함됐다.

군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거리를 만들고 문화생활을 영유토록 돕는 한편,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을 펴며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치매 예방에 힘쓴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여성·청년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학자금 이자지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계속해 증

평군에 주소를 둔 소득분위 8분 이하의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 이뤄진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는 여성농업인 여가·문화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연 18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빈집시스템 구축, 전입 지원,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군수실 하소연대이 등을 추진한다.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찾아 내 귀농인 등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주민의 행복 증진과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상호성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증평 건설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 기관 관계자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 자립 강화'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옥천지역자활센터 등 4개 기관 협약

옥천군이 다문화가족의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

이날 협약에는 김재중 옥천군수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옥천지역자활센터, 옥천여성

취업지원센터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기관 상호간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옥천군은 다문화가족의 직업능력 교육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직업능력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후관리를, 자활센터와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연계한다.

군은 결혼이민자들의 자녀 성장과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을 위한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업무협약 취지를 말했다.

향후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고 종식 이후 다문화가족과 함께 의견수렴, 예로사

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로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관계자 회의를 통해 공동 협력사업도 발굴 할 계획이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한국어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지원, 통번역지원, 고국방문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군수 공약사업인 행복가족상담의 부모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사업 자녀 생활서비스 강화와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장소 '가온타워' 결정

주민 53% 찬성... 김재중 군수 등 100여명 공청회 의견수렴

옥천군은 복지타운 설치 장소로 여론조사에서 주민 53%가 찬성한 가온타워로 결정했다.

군은 김재중 옥천군수를 비롯한 김의식 군의회의장과 패널, 지역 주민 57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타운 설치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로는 충북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 박영 교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찬열 시니어전문강사, 충북연구원 황명구 전문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재중 군수는 모두발언에서 "옥천군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8.8%이며 2027년에는 46%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며 "노인복지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으로 여러 패널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 박영 교수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비용 효율성 등에서 가온타워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황명구 전문연구원은 증평의 복지타운의 사례를 들며 "아무리 좋은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이용자가 사용하기 힘들면 가치가 떨어진다"며 "이용자의 접근용이성, 사업효과성, 운영효율

성, 주변연계성, 지역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옥천군 복지센터 부지로는 가온타워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복지타운에는 시니어클럽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활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5개 복지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가온타워가 53%의 찬성을 받았다"며 "이용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패널 2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안대로 공영재 산하의회에 안전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이 설치한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를 한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괴산군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운영

군청·보건소에 설치 정신건강상태 무료 검사

괴산군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군 보건소 1층 로비와 군청 민원실 적과에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를 각 1대씩 설치·운영하고 있

다. 군에 따르면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건강검진을 꺼려하는 지역주민에게 좀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정신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 정서적 안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우울정도, 스트레스 지수 등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누구나 무료로 검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검진결과를 바로 인쇄해 받아들 수 있다.

특히, 검진 후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받아 군 보건소에서 위탁·운영하는 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돼 전화상담, 치료연계 등 꾸준한 관리서비스도 제공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코로나 추경, 4개월간 '2조원' 분다

저소득층·노인 등 500만명에 지역상품권 등 쿠폰 지급 가구원 수 따라 차등화... 만 7세 미만 263만명엔 10만원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모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4일 임시국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3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137만7천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

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모두 8천506억원어치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1인 가구는 월 10만원, 2인 가구는 17만원, 3인 가구는 22만원, 4인 가구는 27만원어치를 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를 준다. 모두 1조539억원어치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2배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모두 54만명에게 1천281억원의 지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천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줄기로 했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2만9천명 늘어난다. 상반기 내에 대·중·소유동연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획전, 판촉, 캠페인은 48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

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6천여명가량을 투입한다.

먼저 중소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최대 3년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을 4천874억원 확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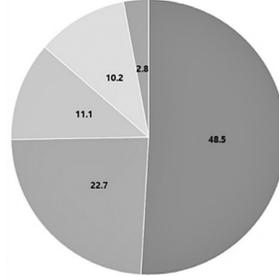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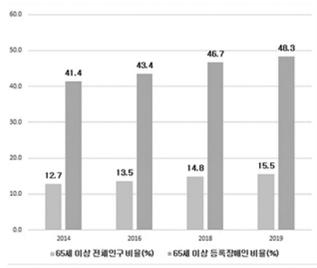
당초 예상보다 청년들의 이직이 줄어들면서 소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797억원을 들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하반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폐지했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이는 저소득층에 3개월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을 596억원 확충하고, 일자리 지원전, 판촉, 캠페인은 48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

장애인가구 고령화 심화... 2명 중 1명 '65세 이상'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장애유형별 비율>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 장애인의 노령화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19년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58만2000명(22.2%), 60대 58만4000명(22.3%) 등으로 60~7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많았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60대 9.3%, 70대 16.2%, 80대 21.6%)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151만명(57.8%)이 여성 110만명(42.2%)보다 많았다.

15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122만3000명(46.7%), 청각 37만7000명(14.4%), 시각 25만3000명(9.7%), 뇌병변 25만3000명(9.6%) 등으로 비율이 높았다. 가장 비율이 낮은 장애 유형은 뇌전증 7000명(0.3%), 심장 5000명(0.2%), 안면 3000명

(0.1%) 장애 등 순이었다.

장애 정도별로는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명(37.6%),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3만명(62.4%)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이 560만명(21.4%)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만 2000명(0.5%)으로 가장 적었다.

등록장애인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이 2010년 37.1%에서 2015년 42.3%, 2019년 48.3%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해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꼴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48.5%), 청각(22.7%), 뇌병변(11.1%), 시각(10.2%), 신장(2.8%) 장애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총 9만7000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년층은 57.6%(5만6236명)를 차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21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주요 추진과제를 시행하거나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 이들 중증장애인이 가구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이 있는 자식·부모·부인·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조치다.

5월까지 소득 하위 40%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모두 1160만명 혜택 전망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

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 2,656억원, 3.17%) 집행과 지난 달 30일에 열린 제3차 비상경제

회의 발표대책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에 발령·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이달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

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노인 맞춤형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2.0' 추진 방안 발표

고령자 복지주택은 1만가구... 무장애 특화시설 완비

정부가 노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총 8만가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이행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1만가구와 고령자 전용 건설임대주택·전세임대 등 7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고령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 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노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작년보다 2022년까지 4천가구가 공급되고 그 이후부터 2025년까지 6천가구가 추가된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 칠성(150가구) 등 6곳 682가

구다. 이중 영덕 영해(124가구)는 바닷길을 고려한 폐쇄된 단지계획이 적용돼 있고 물리치료실과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에서는 문턱을 제거하고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특화 설계가 반영된다. 매입임대도 리모델링 과정에서 신규 건설형 임대와 같은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고령자 공공임대에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케어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거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영구임대 10개 단지와 매입임대 10개 단지 총 20개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

력을 배치해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케어안심서비스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방문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로, 국토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고령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협동조합을 돌봄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

'유아부터 노인까지'... 조합형 돌봄시설 확대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의결... 프리랜서 조합 등 발굴도

영유아와 노인을 위한 돌봄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협동 어린이집이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협동조합형 돌봄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프리랜서가 모인 협동조합이나 경영부실 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협동조합 등 새로운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강화해서 스타트업 단계였던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로 끌어올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협동조합을 돌봄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

다. 돌봄 협동조합을 구성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임차해 주고 생애주기별 돌봄을 위해 특화 교육을 추진한다. 조합형 돌봄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돌봄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 돌봄 협동조합은 2019년 11월 기준 협동 어린이집 158곳, 협동조합형 유치원 1곳, 노인요양시설 9곳, 지역아동센터 18곳, 다함께돌봄센터 7곳 등이다. 이를 한층 확대해 아동부터 장애인,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대가

족·외벌이 시절에는 돌봄이 가족의 몫이었지만, 핵가족·맞벌이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올해 안에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도 새로 발굴한다. 우선 고용이 불안하거나 교섭력이 약한 프리랜서를 협동조합으로 흡수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통·번역가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중개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배달원이거나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이 대상이다. 폐업·경쟁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1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1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흥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문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1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1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1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1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1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현장서 체감한 위기발생 시 문제점은?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코로나19 대응 인식조사 발표

‘위기상황 대처 방안’ 1순위...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 이하 센터)는 충북의 사회복지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총 14일간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대한 충북사회복지종사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의 분야별 사회복지현장에서 체감하는 코로나19(COVID-19)등과 같은 위기발

생 시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모든 사회복지기관, 시설에서 ‘위기상황 운영(대처) 방안’을 1순위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충북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위기상황 운영(대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manual) 교육, 홍보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와 관련된 시설, 휴관, 방역 연기 등과 같은

조치 시 사회복지종사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중단’ 49.5%, ‘대상자의 건강관리’ 21.4%, ‘대상자를 위한 재가 서비스 지원 인력’ 16.2%, ‘대상자의 재가 정보 파악’ 11.4% 순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이용 대상자들에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환자 발생시 보건당국의 강제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강제조

사 찬성 94.8%이며 강제조사 반대 3.8%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정보(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현재도 적절’ 53.3%, ‘더 공개해야 함’ 43.8%, ‘지급도 많음’ 2.9%로 나타났다 하였다.

한편,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은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 체계적임’ 56.2%, ‘체계적이지 못함’ 22.4%, ‘매우 체계적임’ 17.6%, ‘잘 모르겠음’ 3.8%로 나타났다.



충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홀몸어르신 100명에게 식료품 키트를 제작하여 전달했다.

‘행복 나눔 선물 상자’ 홀몸어르신에 전달

충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100명에 식료품 키트 지원

충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중)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홀몸어르신 100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식료품 키트를 제작하여 전달했다.

충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는 개인 맞춤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진행으로 대상자의 상태·욕구 조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직접서비스 최소화 조치로 현재는 간접서비스 제공 및 대면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을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물품 구입 등의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고자, 생수, 쌀, 라면, 죽, 반찬 통조림 등 16종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 100박스를 제작하여 돌봄 대상자 중 식료품 수급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을 선정하여 생활지원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우중 센터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오랜 집안생활과 과도한 뉴스시청으로 더욱 불안한 마음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어,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행복 나눔 선물 상자’를 준비하여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 19 취약계층 긴급지원

도내 취약계층 1129가구에 7900만원 상당 생필품 전달 법인 5곳 대상 방역작업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가 ‘2차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7900만원으로 도내 취약계층 1129가구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및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것이다. 도사회복지협의회는 다중이용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5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중평은 삼보사회복지관)와 자지체는 협

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석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사회복지계는 긴급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종식 후 대처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2일 공동모금회와 연계를 통해 1차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달 24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정기탁 사업으로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천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진천 ‘온달사업’ 통해 생활의 안정 찾았어요”

장애인복지관 등 5개 기관

도배·장판 및 주거환경개선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미다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밑반찬을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달(따뜻하고 달달한) 커뮤니티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활용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에는 (주)진천주거복지센터 두개비하우징, 진천군보건소, 미다래 음식점 등 5개의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과 업체는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권익옹호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주)진천주거복지센터 두개

비하우징은 도배·장판 및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유튜브 채널 개설’... 소통 강화

지역 노인 정서적 안정 도모 · 활기찬 노년 지원코자 마련

충주시노인복지관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

노인복지관에 따르면 해당 유튜브 채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내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도모

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고자 개설하게 됐다.

현재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라인댄스, 요가, 하모니카, 서예 등 4개 동영상 강좌가 게시돼 있다.

복지관은 앞으로 문화강좌, 건

강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지역 노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강좌는 유튜브에서 ‘충주시노인복지관’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지관은 기존의 이용 노인에게 유튜브 채널 구독에 대한 안내 편지, 문자발송 등을 통해 노인들

이 편리하게 채널을 구독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용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춤 상태이지만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내 저소득 노인을 위해 대체음식 전달, 국 배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노인가구를 방문해 청소·방역 활동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비대면 부모교육 진행

코로나19 확산방지 · 예방... 다양한 자녀양육정보 제공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휴원 종료 시까지 비대면 형태의 공통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통 부모교육 사업은 영유아 가정의 부모가 자녀양육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부모로서 자기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교육이 연장되고 있는 시점에 부모와 자녀간에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부모역할 증진

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통 부모교육-온라인 콘텐츠는 비대면 부모교육으로 클로버 부모교육(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자녀권리 존중 부모교육(아이마음 헤아리기),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아이마음 헤아리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아이마음 헤아리기’는 자녀양육 시 겪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어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은 충북공공나무 홈페이지(http://cbkk.cbeducare.or.kr)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교육정보가 제공된다. 또 온라인 부모교육 이수 후 센터에서 제공되는 놀이키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충북도, 장애 아동 청소년에 보조기기 지원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이순희, 이하 보조기기센터)는 보건의료부 장애인보조기기 사물관리 사업을 바탕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One-stop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STAND WITH HUG 장애 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과 후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21개 보조기기센터에서 함께 수행한다.

사업의 목적은 장애 아동 성장에 따라 적절한 보조기기 구입 및 교체가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통합에 기회가 박탈되고 있어 기회를 넓혀주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2002년 이후 출생한 자) 등록 장애 아동·청소년이지만 만 5세 미만 아동도 등록장애인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초·중·고 재학 시 만 18세 초과하여도 만24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품목 1인당 250만원 미만의 기립훈련기, 이동보조기기, 보행훈련보조기기 등이다.

지원 세부 기준에서 2017~2019년 민간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3회 이상 선정 이력이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로 자세한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는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cbat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43-265-0401 또는 카카오톡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플러스 친구를 통하여 실시간 문의가 가능하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충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보건복지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으나 국내에 코로나19가 발병함에 따라 신종 감염병 대응을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2.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한 국민의 평생 건강 지원 강화
 3. 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4.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향상
 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는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 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격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의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의 신속적응을 검토해 관련 치료제와 신속진단제를 개발하고,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력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한편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역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10월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내년 중에 국가병원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11월 한·중·일 합동 훈련 등 국제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한 국민의 평생 건강 지원 강화

올해도 국민의 병원비 부담 완화(문재인케어)는 병원비 경감과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2월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8월에 흉부 초음파, 12월에 심장 초음파·척추 MRI로 까지 넓힐 예정이다.

또한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와 감염병 환자 1인실 보충 적용 등으로 약제비와 병실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거동이 불편 환자 등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처리를 활성화한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 진료 시 자가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또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약 5만명에 게 시범 적용하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특히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총 17개 권역, 70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공급체계와 '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 예방 및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또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17만~25만 명), 노인 방문건강관리(91만~100만 가구)·모바일 헬스케어(100~130개 보건소, 성인→아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올해는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55개 모든 시군구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 활용해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초기 발생 단계부터 집중 관리, 응급 대응 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34개 204명의 응급개입팀을 설치하며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6만 5000명을 대상으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와 매년 약 100명의 심리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자살 유족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 등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복지부는 올해도 어디서나 치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다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조기 검진 및 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 종일 7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장기요양 인지기능 등급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또 치매 안심마을은 기존 256개에서 400개로, 치매조기검진은 345만명에서 565만명으로 늘리는 등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2000억원 규모로 강화한다.

집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서는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 사업을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단순 안부확인·가사 지원 등에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다양화하며 대상도 35만명 독거노인에서 45만명의 돌봄 필요 노인으로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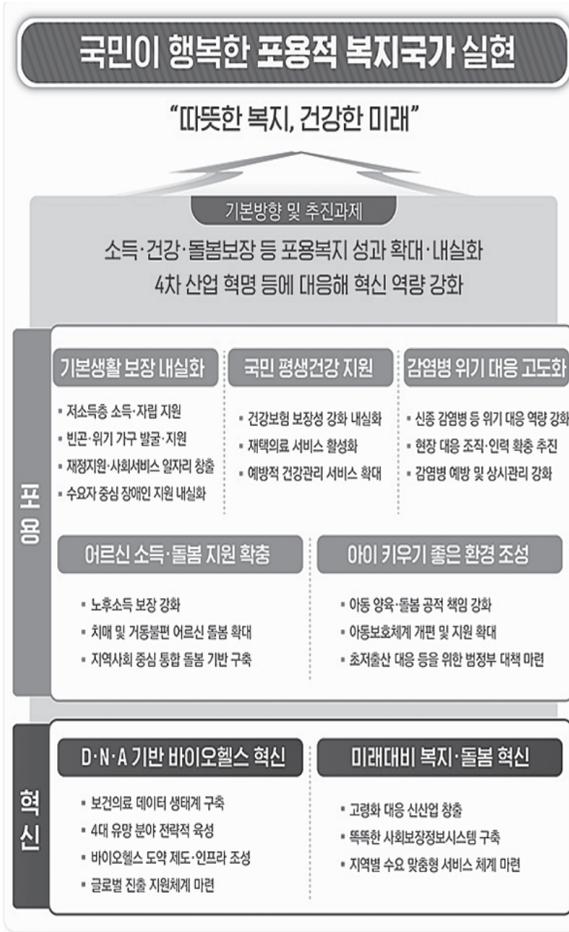
복지부는 올해 1월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 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5개 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빅데이터, 병원 임상 빅데이터,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 피부부 전체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올해 1개 병원을 시범 구축한 후 내년에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 MRI 등)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또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



재가돌봄서비스 확충·바이오헬스 혁신 추진...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 대응체계 강화 국민 평생건강·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사회안전망 확대

가족 입원 등으로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9회 단기 돌봄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시설은 100개소까지 확대하며 치매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람 장비 1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어르신 등이 집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 내 케어안심주택을 2000호 확충하고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도 약 1000호 선정한다.

특히 노인·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AI스피커·IoT설치(음성 가전, 조명 제어 등), 주택개조(미끄럼 방지 등) 패키지 등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2개에서 8개 시군구까지로 확대한다.

종합재가센터(24개소), 주민건강센터(110개소) 등 돌봄 및 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칭)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도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향상

올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의 기준을 완화해 4만명에게 혜택을 주고, 부양비 부과 완화와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도 인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장애인 연금(초중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했고, 근로소득공제 대상도 수급자 전체로 늘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했다.

또 청년희망직움통장은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공제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을 지원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업 등)에게는 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올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의 기준을 완화해 4만명에게 혜택을 주고, 부양비 부과 완화와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도 인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장애인 연금(초중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했고, 근로소득공제 대상도 수급자 전체로 늘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했다.

또 청년희망직움통장은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공제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을 지원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업 등)에게는 자

활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3년 동안 총 9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과 장애인, 신종전염병 등을 위해 17만 9000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해 약 1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 12만명 더 늘리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도 9만 5000명 더 확충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등의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중에 장애인 치료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치료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시범사업 운영은 물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및 재활센터 등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특히 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양육·심리지원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는 간호사 등이 1회 이상 출산 가구를 방문해 건강관리·발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산후 우울 등 가구에는 만2세까지 방문과 복지의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임신부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방문 신고만 가능했던 임신부 신고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장 보육료 도입과 연장 전담교사배치 등 보육지원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이동 확대 조사 업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자립수당과 공공주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지난해 7개에서 3개 더 늘려 10개까지 확충하고, 10월 중 아동 치료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아동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포럼

코로나19와 포용사회

복지광장

코로나19 속 장애인의 날



김경수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세계는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매일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염병 정보단계를 최고 단계(5~6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한 상태이다. 미국 대통령도 "참혹한 시기로 세계 대전 비교되는 사망자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는 과거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

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왔다. 이런 똑같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이 끝난 1948년 국제연합(UN)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 선언문을 선포하였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뺏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하지만 세계인권 선언문이 선포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구나 누리고 있는 권리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실태가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인 것 같다.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사회전 영역을 망라하는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비장애인과 격차를 최소화하는 성과 목표를 제시하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책과 현장에서 온도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

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밀한 노력이 더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수칙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동참하는 모습과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는 항상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했으며 의심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증상과 이동지역을 빠짐없이 일지로 남기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때에도 최대한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도보와 택시를 이용한 사례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이다.

코로나19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다양한 정보와 접근성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현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확진 자는 10,635명이며 546,463명이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다소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가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확진 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대상 중에는 분명 취약계층도 포

함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열악한 게 현실이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를 하거나 구화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화를 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 많아 구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진과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대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캠페인에 대한 정보가 인포그래픽(Infographics)으로 잘 전달되고 있지만 선별진료소에서의 정보 전달 방법에서는 문맹의 노인이나,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기도 힘든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에도 2차, 3차 접촉자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은 생각에서 나온다. 바른 생각은 존중에서 나오며 존중은 인권에서 나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보다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실천되는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변항수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매년 4월 20일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은 원래 제정 당시 '장애자(障礙者)의 날'이었다.

1981년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보장의 의미를 담고자 '장애인(障者)의 날'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년 중 모

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4월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의미를 두고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해마다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하여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4월 20일 '제40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일정을 계획하여 준비중에 있으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일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잠정연기 되었다.

행사에 대한 잠정연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감염자를 확인하고 빠른 치료지원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장애인 집단 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어떠한지 여실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예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장애인들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바이러스 저항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식 환자들이에게 바이러스 감염률과 사망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발열 증상 또한,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장장애인은 경증으로 분류되어 입원대상 순위에서 밀려났다.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0명이 밀집되어 혈액 투석을 받는 인공신장실 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집단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정도 대담병원 정신장애인 폐쇄병동 뿐만 아니라, 경북 칠곡군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을 담고자 '장애인(障者)의 날'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년 중 모

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4월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의미를 두고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해마다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하여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4월 20일 '제40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일정을 계획하여 준비중에 있으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일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잠정연기 되었다.

행사에 대한 잠정연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감염자를 확인하고 빠른 치료지원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장애인 집단 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어떠한지 여실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예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장애인들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바이러스 저항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식 환자들이에게 바이러스 감염률과 사망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발열 증상 또한,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장장애인은 경증으로 분류되어 입원대상 순위에서 밀려났다.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0명이 밀집되어 혈액 투석을 받는 인공신장실 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집단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정도 대담병원 정신장애인 폐쇄병동 뿐만 아니라, 경북 칠곡군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을 담고자 '장애인(障者)의 날'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년 중 모

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4월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의미를 두고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해마다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하여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4월 20일 '제40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일정을 계획하여 준비중에 있으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일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잠정연기 되었다.

행사에 대한 잠정연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당연한 것이었다.

현장의 목소리

교육·문화·복지 아우르는 복합복지공간을 찾아서



유소희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팀장

2017년 아동복지관의 사서로 근무하게 되었다.

아동복지관이라는 것도 낯선데 아동복지관의 사서라니. 입사할 땐 '나는 사서니, 도서관 관리만 잘하면 돼!'라는 생각이었지만, 막상 현장에 있으니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책을 읽으러 오는 아이들보다 목적 없이 여가를 즐기러 오는 아이들이 다수였다. 그리고 대부분 무리를 지어 함께 오는데, 한 명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다 같이 읽고, 한 명이 뛰어놀면 다른 아이들도 뛰어놀았다.

그래서 어느 날은 스마트폰을 하러 온 아이에게 신간이 들어왔는데 읽어보자며 책 읽기를 권유했는데 같이 왔던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다음 날은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알려주니 다 같이 우르르 신청하기도 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른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참여를 유도했다.

그때부터 나에겐 또 다른 직무가 생겼다. 아이들을 관찰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개입을 하는 것.

그런데 아이들을 열심히 관찰해보니 여가시간을 보낼 때 매체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너무 적다. 또 그 무엇을 할 공간이 없다.

보호자가 없어도 맘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무엇을 하든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 어떤 대상자만 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친숙한 공간. 아이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도 책임이 있는 자율적 주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없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역 내 한 곳씩 생기고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2018년 아동복지시설현황통계에 따르면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상담시설 등을 제외한 아동전용시설은 전국에 7개이며, 수련원과 상업시설을 제외하면 딱 2곳이다. 이 중 한 곳은 내가 일하는 곳이다.

사회복지에서는 생애주기 중 성장하는 시기인 어린 시절의 중요성과 사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 자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모든'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국제 비교 맥락에서의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22개국 중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19위라고 한다. 특히 시간 사용과 관련한 항목에서 꼴찌인데, 해결책은 간단하다.

아동들의 여가를 시간 낭비로 보지 않고 진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치러진 21대 국회의

원선거 정당별 정책을 보면 어린이 권리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가끔 보이는 아동복지 공약은 투표권을 가진 부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누구도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의 시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개인사를 운운하며 본질을 흐린다.

이런 현실에서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은가?

문헌정보학에선 '랑가나단의 도서관 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배운다. 지금은 도서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회기관들이 서로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도와주며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아동, 복지, 도서관, 세 개가 묶인 것은 어떤 신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로 생긴 복합적 공간이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새로운 운영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가시적 성과를 넘어 정치적·경제적 논리가 아닌 자유와 보호가 공존하는 아동들의 공간이 마련돼야 할 때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라혜영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hyra21@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충청북도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약정기간 1년의 주택임대차계약 기간과 차임인상률 제한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작년 5월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차임으로 1년 동안 거주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1년 더 거주하고 싶어 임대인에게 문의하니 월세를 지금보다 10만원 올려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대차 계약시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차임 인상 요구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A)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사정에 따라 2년을 거주할 수도 있고, 계약대로 1년만 거주해도 됩니다. 그러나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 인상률은 약정한 차임의 5% 이내입니다. 그런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에는 이러한 인상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2년을 거주할 수 있으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난 올해 5월부터는 임대인은 기존 차임의 5% 내에서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다시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더 이상 차임인상률 5% 내 제한을 받지 않아 그 이상의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봉사단

신문봉사단, 신문발행 봉사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신문봉사단(단장 이희일)은 지난 3월 30일(월) 청주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신문봉사를 진행하였다. 신문봉사단은 2010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희일 단장은 "매월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충북사회복지신문이 변화하는 사회복지패

러다임 소개 및 충북 도내 지역별 복지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성실히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사랑의열매&마중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사업체 모집

- 신청 및 모집기간: 2020.2.10.(월) ~ 2020.12.20.(일)
- 대상:
 - 훈련생: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금 (1인기준)
 - 훈련생: 훈련준비금-40,000원 (6일 이상 출석 시 지원), 일비 1일 기준 17,000원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일 19,340원
- 모집기간: 상시모집
- 지원고용 훈련기간: 사전훈련(최대 6일), 현장훈련(4주~6주), 훈련시간(1일 4~8시간)
- 주관: 우리들정신건강센터
- 문의: 043) 267-5835, 285-5835
- 참고: <http://www.woorideul.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함께 여는 자동문' 무료자문 상담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 선정방법: 매일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일 1곳 선정
-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 참고: <https://www.bokji.net>

[여송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신청양식 확인-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여송사회복지재단 사무국 02-553-3488

[따뜻한동행] 2020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모집 안내

- 지원대상: 분야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있는 장애인
 - 문화체육, IT&과학기술, 예술, 사회교육 분야
 -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장애유형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
 - 당사자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지원품목 결정
 - 단순 이동 목적의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지원 제외
- 접수기간: 2020.3.10.(화) ~ 7.10.(금)
- 신청방법:
 - 따뜻한동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www.walktogether.or.kr)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ddadong@walktogether.or.kr)
- 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070-7118-1937)

[희망나눔 주주연대]로 ·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음 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0.4.13.(월) ~ 5.15.(금) 18:00
- 신청자격: 사회적 가치와 문화융합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 및 기관(공유연적 포함 80명 이상의 공간 확보 가능)
 -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포함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한 실버카페 사업운영
 - 노인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및 지역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공간 운영
 - 세대간 교류 및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인천공항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조성 인테리어 및 사업비 기관별 3억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 (<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가능
- 문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T. 032-456-3326)

[밀알복지재단] 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사업명: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 지원내용: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등(사업별로 상이)
- 신청기간: 2020.3.1.(일) ~ 2020.12.31.(목)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s://www.miral.org>)
-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 (070-7462-9135)

대체인력지원사업(앤드) 참여기관모집안내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명칭을 간소화하여 (앤드_AND)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12월 말까지>

- ◆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 이용시설(복지관) 포함 (현재 526개소)
 - 노인장기요양법 적용대상시설은 지원제외
 - 사업기간 중 신고되는 시설은 지원 제외
 - 5인 이하 이용시설 신청가능
-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 기타사항: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상시인력 모집중(기관추천 가능) 단기간력 수시모집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중국에서 입국한 사유 등으로 14일간 업무가 배제되는 경우 파견자(앤드)를 파견지원 해드립니다.

※ 대체인력지원사업(앤드)을 연결해주는 대체인력 파견자(앤드)라는 이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TEL. 043-232-2213, 2290
FAX. 043-232-4413
홈페이지: <http://cbsw.or.kr>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충청북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복/지/만/평

희식

이창신 www.bokmani.com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자원 봉사자 모집

▶ 문진안내 봉사

관리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주성폭력상담소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64-1366

▶ 미술교육 지도

관리센터: 늘푸른아동원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36-6696

▶ 이마음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16-0031

▶ 영어, 수학 학습지도

관리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73-5075

▶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16-9811

▶ 지역아동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855-1090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857-5960

▶ 원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84-0103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67-4590

▶ 문화예술 공연 봉사

관리센터: 수정노인의집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043-218-3436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